

오세훈 서울시장, 첫 국무회의서 文정부와 대립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野인사로는 첫 참석

“지자체도 공시가격 결정 참여 권한달라”

식약처에 간이진단키트 사용 신속 허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방역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稅)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사용을 신속한 허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견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

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이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의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김희재,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투기행위 미연 방지 필요

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재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주호영 “내주까진 합당 방향 결정해주길”

안철수 “당원 뜻 묻는 과정 진행할 계획”

“대통합과 정권 교체, 목적 동의하면 무리없이 목적 달성”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할 테니 다음 주 정도까지(합당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믹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화를 줬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들도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들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중에 합당에 대한 의견 정리가 가능한지를 묻자 “내년 대선 때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큰 목적에 동의한다면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와 국민의당은 그것에 대해

동으로 증명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은 의사가 정리됐나고 반문했다”며 “금요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합당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알려달라고 말했다”며 “국민의당이 시도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시간 계획표를 확인하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그런(합당) 뜻이 확인되면 그 뜻에 따라서(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로 미뤄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전준위를 발족하면 국민의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목요일쯤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당의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고개 숙인 與원내대표단 “2030·초선 문제의식 공감”

김영민 “스스로 공정한, 청년 아픔 공감했다 반성”

이소영 “성역없이 성장해야...민주당 미래 없을 지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재보선 참패 원인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자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불러왔다. 2030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초선, 재선, 3선들의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금은 국민 뜻에 맞게 변화를 추진할 때”라면서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의원의 다양한 의견과 당원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하게 혁신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주당은 스스로 공정한, 민생을 제대로 살렸나,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했나, 남의 허물을 태산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허물은 티끌처럼 생각했나 반성 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소영 원내부대표도 “민주당은 지금부터 제대로 반성하고 성역 없이 성장하고 스스로 치열하고 절박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확인하고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만 보고 들던 것만 듣고 말하던 것만 말하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탓 말고 자성하자. 한계나 성역 없는 토론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자”며 “우리에게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버려라. 안주하던 태도를 버리고 때로는 거칠게 날아오는 쓴소리로 더 잘 듣고 견디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 꼭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대표단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임기가 끝난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안고 물러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